

시민사회와 한국의 민주화

조지 카치아피카스 (웬트워스 공대)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Department of Humanities
550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USA
617-989-4384
katsiaficasg@wit.edu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무관심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 무효화

시민 사회와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역할

광주 중심성의 지속

전통과 해방의 변증법

자유 의 비용

시민사회와 한국의 민주화

조지 카치아피카스 (웬트워스 공대)

자연과학과는 달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진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과거의 역사 진행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완전하지 못하며,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나의 의견은 과거의 성과와 발전의 핵심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평가로 제한하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학은, 안정을 위한, 그리고 최고의 미래 보여주는 기준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중심으로 했다.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의 토대인 마일 동맹에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역내 2인자로서의 역할이 맡겨졌다. 대만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막대한 양의 필수불가결한 미국의 원조로 만들어졌고,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는 미국과의 특권적 관계의 혜택을 받았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역사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고려할 때, 미국 중심 세계모니에 대한 충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길임이 확실해 보인다. 대만이 이미 그랬듯이, 마중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대한민국은 버려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이 많은 승리를 거둔 덕분에, 오늘의 한국인들은 경제적 번영, 막대한 개인의 자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1997년 IMF 위기에서 회복한 후, 한국은 계속해서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 10년간 진보 대통령들의 통치는 경제 확대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가능하게 했다.¹⁾ 동시에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정부에 편입됐다. 보수진영에서는 반격을 준비했다. 2008년, “뉴라이트”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MB)이 취임하자마자, 군사정권의 암흑시대 이후 거두었던 많은 성과들을 불도저로 쓸어내듯이 없애기 시작했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대중 간에 차이를 포용하면서 공정한 집단 결정에 도달하려는 공공의 논 의과정이다. 다수에 대한 반대는 귀중한 교정의 도구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지금의 방글라데 시는 부정적인 예인데, 왜냐하면 경쟁 정당들이 반대세력 인사의 체포를 자신들의 의지를 강제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이다. 반면 네팔은 이보다 훨씬 긍정적인데,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법의 테두 리 안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MB 하에서의 대한민국은 방글라데시에 가까워졌다. 노무현을 비극적인 자살로 몰아넣은 것은 현 정권의 복수 중 가장 혐오스러운 사례다. MB 하에서 일본 정치 인들은, 한국 야당 인사들보다도 자주 청와대의 결정과정에 개입했다.

1) 김대중, 노무현 재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두 배로, 또 두 배로 늘어났다. 자율적 노동조합을 합법화하고 노사 관계를 관리할 노사정 3자 체제를 만들었으며, 많은 시위를 허용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주식 시장 가치는 173%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었다.

한국 내의 갈등하는 세력에는 크게 과거와 현재의 친일파 계층의 권위주의와, 공장과 농촌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과 그 동지들의 진보적 성향까지 있다. 이 두 진영 간의 경쟁이 현재 민주화와 그 쇠퇴의 역학을 결정한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 나름대로는 ‘근대화론자’였던 — 권력에 굶주린 일부 조선인들은 일본과 협력하여 이 나라에 재앙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1956년 일본 패망 후, 똑같은 사람들이 충성의 대상을 미국으로 바꿔서 이후로 계속된 미국 주도의 통치 하에서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 세기도 넘는 오랜 투쟁 끝에²⁾ 친일파는 편하게 권력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특히 주요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일반 한국 서민들의 삶은 그들보다도 훨씬 나아졌다. 남한의 대다수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고, 일본 식민지 시대나 미국의 지지를 받은 군사 독재정권 시대에 비해 억압은 상당히 줄었다.

잠시 후 상술하겠지만, 최근의 상당한 후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민주화에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문화적 유산에는 공동체 의식과 관대한 유교적 공공의 장이 있다. 불평등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낮은 지니계수와 역동적인 시민 사회는 20세기의 투쟁으로 점철된 20세기 역사의 산물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권의 반대세력이 수만 명의 인파를 거리에 모을 수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다. 동시에, 지난 반세기 동안 백낙청이 명명한 ‘분단 체제’가 고착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이 존속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후기 식민주의 정체성 때문에, 스칸디나비아도 미국식 경제적 불평등과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더 깊은 문제에서 파생되는데, 바로 미국이 다시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다는 매우 실제적인 가능성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1994년 6월 미국은 북한을 폭격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 마지막 순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문에 주한 군 사령관의 추정으로 300만 명이 죽을 전쟁을 겨우 피할 수 있었다³⁾. 2002년 초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의 일부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⁴⁾. 2003년, 에드워드 J 베이커, 도널드 그레그, 돈 오버도퍼와 스티븐 보즈워스 등 미국의 저명한 한국 전문가들이 서명한 외교협회 보고서는 해상 봉쇄를 지지하면서, “미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도 고려해야 한다 ... 전면전시 북한이 처할 위험을 고려할 때 남한을 침략하기 보다는 제한적 반격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 더욱 대규모의 전투는 실제적 위협이다⁵⁾”라고 주장했다. 베이커와 오버도퍼는 해상 봉쇄로부터는 거리를 뒀지만, 북한에 대한 폭격 가능성은 지지했다⁶⁾. 오바마 정부 들어서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봉쇄와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2) 필자의 신간 *Asia's Unknown Uprisings: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Oakland: PM Press, 2012) 참조 바람. 한국어판은 도서출판 난장 출간 예정.

3) “Engaging North Korea,” by Jimmy Carter, *New York Times*, October 27, 2002, p. 13. 참조. 또 다른 미국 연구는 첫 몇 주 동안 미군 10만, 남한군 49만, 한국 민간인 수백만이 죽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4) 2002년 3월, 미 국방부의 미국 핵정책 검토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포함한 7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New York, CFR: 2003) pp. 44-45.

6) *Ibid*, p. 50. 사적인 대화에서 베이커는 미국과 남한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North Korea/It's Time to Start Talking” in *Global Asia* (Volume 4 No. 4, Winter, 2010)에서 “우선 군사적 행동을 더 이상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1953년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의 비극⁷⁾은 북한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는 맥락에서 발생했다. 비록 남한과 미국이 곧바로 북한을 공격의 주체로 비난했지만, 이 사건은 남북한 사이의 바다에 위치한 '북방한계선(NLL)'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의 한 부분이었다. 1999년, 최소한 17명의 북한 해병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목숨을 잃었고, 2002년에 벌어진 또 다른 충돌로 6명의 남한군과 13명의 북한군이 사망했다.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은 2010년 5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선언하고 미군의 '경계' 강화를 지시하면서 한층 더 강해졌다. 2010년 7월 21일에는 미국과 남한 해군은 동해와 서해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했고,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국경 해군력 강화에 참견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북한을 위협했다.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일본, 미국과 공조하여 나라를 분열시키고 북한 반대 세력을 규합하는 한, 한국은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의 발전은 상당했으나, 10년간 이어진 DJ의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은 북한과의 지속되는 전시상황을 종결시키는 데 실패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대북관계는 다시 심각하게 경직됐다. 일본과 미국이, 20세기에 이미 그랬듯이, 자국의 경제적 안위를 위해 한국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불길한 가능성은, 여전히 실재한다. 새로운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 기업들이 재건사업을 하고,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이익을 얻을 막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심지어 북한으로부터의 과장된 위협마저도 미국에게는 자국 무기산업과 그 기업들이 일본, 남한과 대만에 선진 미사일 시스템을 판매하는 촉진제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미국에게 도움이 됐다.

남한 국민들이 국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든, 국제 정치역학은 틀림없이 여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통일은 DMZ 양쪽의 남북한인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남한은 내수시장과 자원, 생산을 확대할 기회, 그리고 잘 훈련된 인력을 얻는 한편, 북한은 생산성 높은 농지, 새로운 투자, 선진 기술, 그리고 숨 막히는 미국 봉쇄의 종결이라는 혜택을 받을 것이다. 두 나라는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 준비 상황이 끝난다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얻을 것이다. 막강한 미국에 처음으로 맞서 버틴 조그만 나라 북한은 그 동안 반세기 넘게 끊임없는 적대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독일 통일과는 다르게, 남북통일은 비교적 진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나라에 비극적이고 부당한 일제와 미제의 포악이 횡행했기 때문이다⁸⁾. 천 년 이상 한 나라였던 한반도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파괴되고 분단됐다. 유럽의 거인인 독일과 달리, 통일한국은 동아시아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통일된 한국이 스칸디나비아식의 중립과 민주주의를 모델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식 불평등을 보편적 번영으로, 분열을 합리적 논의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옛부터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는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6자 회담과 같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외부인들이 개입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통일은 남북한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 남북한인들이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진정으로 '독립'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통일한국을 통해 남한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해질 수 있지만, 중국에게 북한은 마일로부터의 또

7) 2010년 3월 26일, 남한 해군의 '천안함'은 두 동강이 나서 침몰하면서 46명의 해군이 사망했다.

8) 두 나라의 대조에 대한 논의는 다음 참조 Paik Nak-chung, "Habermas on National Unification in Germany and Korea," *New Left Review*, September/October 1996.

다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완충지대로서의 이점이 있다. 십 년 동안의 경기침체에 빠진 일본으로서는, 인구와 경제 규모 면에서 일본을 추월할 지도 모르는 통일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 남북이 통일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대륙에 마지막으로 남은 군사적 발판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은 계속 진출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려던 정책 입안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미주의는 사회 지형에서 하나의 항구적인 특징으로 남아 있다. 상반된 문화적, 정치적 지지 때문에 때로는 외부인들이 혼돈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 남한은 아시아에서 가장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를 보면 막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미국의 쇠퇴와 함께, 세계 경기 침체, 미국인들의 탐욕, 그리고 아시아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영토 쟁탈전 등의 요인들이 한국인들의 대미 감정에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불행히도, 남한의 후기식민주의 정체성은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김대중, 노태우 두 전 보적 대통령들마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려고 노력했으며, 끊임없이 미국에 경의를 표했다. 2003년 취임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정말 한국적이게,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라크 파병을 약속했다. 왜 미국에 대한 생각을 바꿨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노 대통령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기분 나쁜 듯 대답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부시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라크 파병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더욱 첨단 기술의 군사력을 키우는 동시에, 연간 국방 예산을 6.3에서 9.9퍼센트로 늘려 20가지가 넘는 신무기 체계를 갖추고 50만 명의 상비 무장 병력을 유지함으로써 “협력적,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국방개혁 2020’도 노무현 정권 당시 승인했다. 이 계획의 총 비용은 6,600억으로 추정됐다.⁹⁾

대선 전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놀랍게도 국보법을 철폐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필요한 의석수도 얻지 못했다. 국보법을 철폐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이는 근본적인 실패로, 이 때문에 이후 민주적 권리가 침해당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국보법은 계속해서 급진 운동가들을 잡아들이는 데 이용됐다. 이른바 ‘민주적’ 정부에 대한 한총련 운동의 결과, 경찰의 수배를 받는 180명의 학생들은 점점 소수파가 되어 가는 조직의 지하 운동원으로 숨어 살아야 했다.¹⁰⁾ 경찰의 자의적인 국보법 적용으로 구금된 학생수는 점점 늘어났다. 2003년, 민주노동당의 학생 당원이었던 김용찬과 김종근은 국보법 7조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 건국대생들의 ‘이적행위’의 증거 중 일부로, 정부는 마르크스의 ‘자본’, 루이 알튀세르의 ‘마르크스를 위하여’, 그리고 필자의 책 ‘신좌파의 상상력: 전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년’을 소지, 사용한 점을 들었다. 학생들은 철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나눠준 소책자에 이상의 책들의 일부를 인용하여 쓴 것이었다. 국보법을 유지시키고 부시에게 굽실거린 것에 더해, 노무현은 중국의 압력에

9) https://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9/05/205_27123.html, accessed May 26, 2009.

10)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of the Republic of Korea, *A Hard Journey to Justice* (Seoul: Samin Books, 2004), p. 334.

못 이겨 노벨상 수상자들의 모임에 참석하려던 달라이 라마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2006년 12월 대대적 FTA 반대시위 직후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이 넘게 FTA에 반대한다고 하였으나, 노무현은 한국 경찰이 향후 모든 FTA 반대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방관했으며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막았다.

퇴임 당시 노무현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다는 것이 과연 놀랄 만한 일일까? 노무현 정부 하에서 진보적 정부와 사회운동의 힘의 역전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너무나 많은 진보 운동가들을 정부로 끌어들이므로써, 그의 정부는 거리집회를 약화시켰다. 전문적 NGO들이 길거리 시위를 대체하면서, 운동은 탈정치화됐다. 동시에, 퇴임 전에 FTA 승인을 받으려는 완강한 의지 때문에 거의 모든 진보 세력이 환멸을 느끼게 함으로써, 노무현은 지지 기반을 잃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열렬한 노사모 회원에서 정치 거부자로 만들었다. 그의 열린우리당은 영향력을 잃고 다른 정당들에 흡수, 통합됐다. 학생운동의 탈정치화는 1980년대 학생운동의 성과로부터 나온 아이러니한 부산물이었다. 여기에 역사의 일반적 '규칙'들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 찰스 틸리는 민주주의는 언제나 사회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반대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전임자들에 비하면 빛난다. 임기 중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퇴임 후에는 많은 사랑을 받아서, 2008년 중에 몇 달에 걸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고향을 방문했다. 다른 전 대통령들 중 전두환이 광주 학살에서의 역할과, 반납하라는 법원명령에 불복하고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빼돌린 공개적 거짓말 때문에 불명예를 안았다. 노태우는 거의 50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되돌려줬지만, 조용하게 살고 있다. 노무현 바로 이전의 두 전 대통령 YS와 DJ는 자식들의 부패 때문에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YS의 아들은 뇌물 때문에 감옥에 갔고, DJ의 아들들 세 명 모두 부정부패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비해 노무현은 대통령직을 떠난 후 1년이 넘도록 지지자들의 애정을 누렸다.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무관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은 두 배로, 그리고 또다시 두 배로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경제가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보 세력들은 의미 있는 대안도, 카리스마 있는 후보도 내놓지 못했다. 전 국민의 절반이 FTA에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요 대선 후보도 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 MB의 "747"선거공약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7%, 1인당 국민소득은 또 한 번 두 배로 늘어나서 4만 달러가 되어,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명박을 차치하고도 한국의 정당제도는, 50% 이상의 국민이 FTA를 반대함에 불구하고 2007년 대선에서 어떤 주요정당도 FTA를 반대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이명박의 공약은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득표율 48.7%로 2007대선에서 승리했다. 문자투표가 처음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사상 최저인 62.9%를 기록했다. 이는 2002대선의 70.1%보다 상당히 낮고, 1987년 89.2%, 1992년 81.9%, 1997년 80.7%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것이다. 과거 선거들에서 중요

한 변수였던 지역색은 이번에도 뚜렷했다. 그러나 가장 큰 화제는 낮은 투표율이었다. 유효 유권자의 31%만의 선택을 받고 이명박은 대통령이 됐다.

몇 달 후 총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 299석 중 153석을 얻으면서 완전한 다수당이 됐다. 우파가 차지한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200석이 넘는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면서 만들어진 야권의 통합민주당은 81석, 민노당은 5석에 그쳤다. 대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요 화두는 유권자 무관심이었다. 2008년에 유권자의 절반 이상 기권하고 46%만이 투표권을 행사했다¹¹⁾. 아래의 표를 보면 투표율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연도	참여율	비고
1988	76%	6월 항쟁 직후
1992	72%	
1996	64%	
2000	57%	
2004	61%	노무현 탄핵 1개월 후
2008	46%	유권자 37,795,035 중 17,389,206 명 투표

선거 참여율 하락세는 정부에 대해 무관심을 반영하는데, 한국이 미국화된 특징 중 하나이다. 1987년의 치열한 정치투쟁과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이 유권자 참여율에 상당한 상승을 야기한 한편, 2008년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정치의 관례화에 대한 반응이었다(이 때 양대 정당들은 FTA를 받아들였다). 보수세력이 투표를 독점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무현 임기 이후 주류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다. 46%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에 반영된 대중의 비정치화는 뉴라이프가 민주주의의 성과를 역행시킬 문을 열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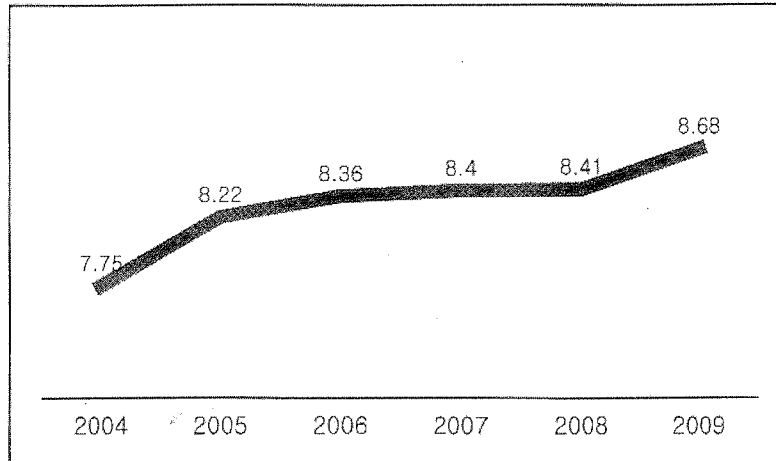
제도권의 '민주주의'가 사람들에게 실질적 선택권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핵심적 한계 중 하나다. 실제로, 기존의 거버넌스 체제는 단지 의례화된 민주주의일 뿐,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코카콜라와 펩시의 차이 정도밖에 없는 정치인들을 두고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선거는 막대한 군비 지출과 대기업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투표는 수십 년 동안 대기업이 국고에서 돈을 가로채는 행위나 전쟁기계의 끝없는 탐욕을 키우는 국방부 연간 예산 확충에 대한 대안을 주지 못했다. 몇 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부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기분이 들도록 할지는 몰라도, 실제 사회적 결정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사회운동의 경험 내에서 재형성된, 심사숙고를 거친 민주주의는, 현재의 지배적인 시스템인 대의 정부가 제공하는 가능성들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대만에서는 국민투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정책에 직접 접근하여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 점에서 명백한 개선이지만, 군사화된 민족국가들이 통치하는 세계 체제에서는 이러한 보완마저도 완전하게

11) Doh C. Shin, p. 9; Balbina Hwang, "The Elections in South Korea: A Victory for the Electoral Process," <http://www.heritage.org/research/asiaandthepacific/wm484.cfm>, accessed March 24, 2009; Angus Reid Global Monitor, "Election Tracker South Korea," <http://www.angus-reid.com/tracker/view/1472>, accessed March 24, 2009.

민주적인 거버넌스와는 거리가 멀다).

MB정권하에서 많은 일반 서민들의 경제 여건은 악화됐다. 경제 양극화가 심해졌고, 아래의 그래프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도, 부의 배분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서, 2006년에 한겨레신문은 대한민국 인구의 1%가 토지의 60%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¹²⁾

그래프 1. 한국인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소득 비교(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



출처: 통계청 자료 발췌, 손호철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한국 정치학회보 43권 5호 p87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 무효화

MB정권은 중산층을 공격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의 힘겨운 투쟁을 통해 쟁취한 진보 민주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 했다. 2008년 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새 정부는 노무현 임기 중에 부패 혐의로 구속된 재벌 총수들을 풀어주고 특수 훈련을 받은 전투경찰의 증강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조치들은 불명예스러운 전 대통령이자 이명박의 친구인 전두환을 연상시킨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추종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2008년 4월 19일에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여 부시를 만났다. 부시 대통령의 골프 카트를 운전하고 다닌 후, 이 대통령은 그 날 저녁 한국 정부의 5년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많은 곳에서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 컨서서스로부터 남아 있던 모든 것을 폐기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자본주의를 거의 파괴하는 ‘제2의 레닌’ 역할을 했다고 추앙 받는다). 그러나 이명박과 한국 뉴라이트 측에서는 부시에게 공감하면서, 미국과 세계경제에 재앙이었다고 증명된 부시 시대의 정책들을 모방했다. 풀뿌리 대중들이 오히려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손쉽게 승리했음

12) 2006년 10월 3일자 한겨레신문

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물밑 듯 쏟아져 들어오게 할 빗장을 열었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쳐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이에 결국 이 대통령은 이전에 미국의 무제한 수출 요구에 항복했던 결정을 수정하게 됐다. 남한 시민사회는 상의하달식 신자유주의에 매우 필요한 교정 역할을 했다.

노무현의 리더십 하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냉전 시대 국가가 허가한 수만 건의 살인의 조사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MB정부는 이 위원회를 무시했고 그 권한과 수명을 제한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기의 친일파를 조사하던 공식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11개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고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였다. 이 둘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 세대에 남길 생태적 악몽이다.

MB 정부가 실행한 모든 문제적 조치들 중에서도, 언론에 대한 탄압이 가장 우려된다. 2008년 7월, MBC PD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사실을 과장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결혼식을 준비하던 예비신부를 포함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을 하나씩 구속했다. 대통령의 측근이 영어 방송국 아리랑 TV의 사장으로 임명됐다. 24시간 뉴스를 전하는 케이블 방송 YTN에도 신임 사장이 임명됐다.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그의 출근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개입했다. 노조 간부들은 수 차례 심리에 불려갔다. 그리고 네 차례 출석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됐다. 인터넷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 7월 24일, 구글 코리아는 경찰청장의 동생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 호텔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동영상 두 개를 지우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¹³⁾. 미네르바라는 블로거는 세계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부가 경제 관리에서 보인 무능을 폭로하였고, 이후 추적당하고 기소됐다(그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대통령과 측근들은 마음대로 언론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이 그러면 명백한 범죄로 취급된다. 한국의 보수 신문(조선, 중앙, 동아)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 운동은 불법이라고 선언되었고, 인터넷으로 이 운동을 조직한 사람들은 기소 당하고,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권을 압수당했다.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워낙 강해서 심지어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범죄로 본다.

‘뉴라이트’ 신봉자들은 기뻐했다.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을 따라 한 이들은, 한국의 발전에 있어 민주화 운동의 역할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교과서들을 수정했다. 뉴라이트 세력은 전국 교사들에게 널리 보급된, 정부의 ‘업데이트’된 한국사 동영상 제작을 도왔는데, 여기서는 한국 민주화 역사의 일부로서 광주 5.18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공식 수사 이전에, M B의 뉴라이트 지지자들은 ‘레드 콤플렉스’를 되살리려는 더 큰 계획의 일환으로 1948년 제주 4.3전체를 “공산주의적”이었다고 꼬리표를 달았다.

대통령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 외에, MB 정부가 언론을 공격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과의 새롭게 친밀해진 관계를 덮으려는 것이다. 10년간 진보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고, 중국은 이제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됐다. MB는 —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의 발자국을 따라 — 과거 정권의 유산을 무효화하고 한국을 일본에 가깝게 하려고 한다. 일본에서 태어나 쓰키야마 아키히로라는 이름을 쓰던 MB는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로 직접 일본 총리를 만나 왔다. 그는 자신의 일본 친구들에 대한 반대는 작은 것이라도 참지 못한다. UN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었던 2008년 12월 10일에 그의 정부는 ‘위안부’였던 여성들과 그 지지자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

13)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300711.html, accessed on July 27, 2008.

앞에서 벌이고 있던 평화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여섯 대의 전경 버스를 보냈다. 이 한 시간짜리 집회는 1992년 이후 매주 열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은 더 나아가, 일본 대사관 반경 300미터 내에서 어떤 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009년 1월 12일 아소 일본 총리와 의 월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수백 명의 한국 여성들의 일제 식민지 시기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 요구를 무시한 미쓰비시 중공업을 한국 위성 발사 사업자로 선정했다. 미쓰비시가 제안의 일부로 기술 이전을 거부했음에도, 이 대통령은 기술 이전을 포함하여 계약했던 러시아 회사로부터 계약을 변경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일간 경제 관계 강화¹⁴⁾”를 더 중시했다고 보도됐다. 중국이 역내에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은 10년 동안 경제침체에 허우적거리는데,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앞으로 끌고 나가는 데 클루소 Clouseau 형사급의 수사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일본을 과찬하는 사람은 그만이 아니다. 다른 이들도 한국을 일본의 “팩시밀리”, 즉 “아시아에서 특별히 현대 세계의 과제에 걸맞은, 우월한 국가”로 여긴다.¹⁵⁾ 남한의 애국자라면 누구라도 북한에 대하여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하겠지만,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는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그가 독도가 일본 영토의 일부가 되는 데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나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후, 이 대통령은 그의 발언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 년 후,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 특히 그가 대통령 선출 이전에 실용적 대북정책을 약속했기 때문에 — 그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심하게 악화됐다. 공평한 정책 대신에 그는 끊임없이 일본 지도자들과 단합하여 북한을 주변화하고 고립시켰다. 이는 많은 한국인들의 눈에는 국익에 대한 수치스러운 배신으로 보였다. MB는 북한을 고립시켰을 뿐 아니라 (이 때문에 개성공단 계약은 무효화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했다), 자신의 측근들을 고위직에 임명하려는 고집 때문에 여당 안에서도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불도저’라는 별명에 걸맞게 MB는 자신에 대한 비판은, 여당에서 제기하는 것마저도 수용하기를 거부한다. 대신에 그와 뉴라이트 세력은 인기도 없고 의문스러운 정책들이 반대를 짓밟고 강행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2009년 5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도심 대규모 집회허가를 중단하고, 이제는 불법이 된 공공집회를 벌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속할 권한을 경찰에게 준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경제를 불모로 한 불법과업과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면 후진적 시위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¹⁶⁾

14) 요미우리 신문 2009년 1월 13일자 보도 인용, 한겨레신문 2009년 1월 15일자

15) Meredith Woo-Cumings, “Market Dependency in US-East Asian Relations”, in Arif Dirlik (editor), *What Is In a Rim?*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1998) pp. 166, 184.

16)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356066.html, accessed on May 25, 2009.s

시민 사회와 민주주의

저명한 카네기 외교 윤리 협의회는 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화를 돌아보며 — 영웅적인 시민들의 운동이 아니라 — 노태우 개인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 인물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오랜 전통을 따라, LA 타임즈의 프랭크 겁니 기사는 노태우가 “상당히 진심으로 민주주의자였다. 그는 ‘한국에는 민중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에 원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썼다.¹⁷⁾ 미국의 많은 엘리트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엘리트가 주도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전두환의 독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중국 공산당에 비해 우월했다고 정당화하면서, 노태우를 민주화 운동의 적이 아닌 참여자로 여긴다.¹⁸⁾

카네기 보고서는 한국은 “시민사회가 취약”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국의 민주화에 미미한 영향밖에 끼치지 못했다고 하면서, 6월 항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노태우의 6.29 선언을 언급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을 이러한 변화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주장했다.¹⁹⁾ 1987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한국 특사였던 개스톤 시거는 또 다른 글에서 “노태우는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로 이끌”었고, “경찰의 권력을 약화”시켰으며, “노동조합에게 자유를 주는” 정책을 폈다고 썼다.²⁰⁾ 내가 이런 글들을 김근태 의원에게 보여주었더니, 그는 2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들의 결론은 “모욕”이라고 했다.²¹⁾

지금 때늦은 지혜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는 노태우가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전두환보다도 더 많은 운동가들을 구속시킨 것을 알고 있다. 전, 노 두 독재자는 광주 학살에서의 역할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다. 전두환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발뺌했고, 노태우는 횡령한 돈 수억 달러를 반납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전문가들은 그가 나쁘지 않았고, 한국의 민주화가 “엘리트 주도”였다고 믿는다. 이런 이들은 현실을 완전히 뒤섞어버린다. 이들의 생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희생하고 투쟁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6.29 연설”에서 “시위와 최루탄을 멈추”라고 “제안”한 노태우가 한 것이다.²²⁾ 한국 민주 운동가들이 항쟁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개스톤 시거가 2월에 한 연설이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킨” “미국 외교의 최고의 성공”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6.29는 정치 자유화를 재촉한 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시위를 잠재우는” 데도 필요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²³⁾ 이렇게 뛰어난 두뇌를 가

17) Frank Gibney, *Korea's Quiet Revolution: From Garrison State to Democracy* (New York: Walker and Co., 1993) p. 99. 노태우의 정보원들이 겁니에게 민주신학 팸플릿을 보여줬는데, 그는 여기서 “민중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바꾸어 썼다.

18) See Jungkwan Cho, “The Kwangju Uprising as a Vehicle of Democratization” in GiWook Shin and Kyung Moon Hwang (editors), *Contentious Kwangju: The May 18 Uprising in Korea's Past and Present* (Lanham, Maryland: Rowman and Littlefield, 2003).

19) *Ibid.* 6.

20) Gaston Sigur, “A Historical Perspective on US-Korea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1987-1992,” in Carnegie Council, *Democracy in Korea: The Roh Tae Woo Years* (New York: Carnegie Council o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92) pp. 9-17.

21) 김근태와 2008년 8월 2일 서울에서 인터뷰

22) Han Seung-soo in Carnegie, p. 119.

23) David I. Steinberg, p. 47

진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최고 지도층에 있으니, 미국이 그렇게 빨리 쇠퇴했다는 데 놀라울 것이 있겠는가?

시민사회의 역할

카네기 협의회는 한국 시민사회가 취약했다고 보지만,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에서 광주와 6월 항쟁에 이르는) 경험적 역사를 보면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 시민사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김선혁은 이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동맹을 조직하고, 야당과 연대하여, 중국에는 ‘민중 쫓기’로 권위주의 정권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민주화의 전체 과정을 시작하고 주도했다 ... 시민들의 집결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으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동력은 언제나 국가가 아닌, 이에 대항한 시민사회로부터 나왔다.”²⁴⁾

첼머스 존슨도 비슷한 의견을 보인다. “1961년에서 1989년까지 남한은 냉전 기간 중 최악의 군사 독재자들이 다스렸다. 마침내 한국인들이 그들을 끌어내렸고, 지금은 상당히 건강한 민주주의를 갖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든 공은 한국 국민들에게 돌려야 한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동아시아에서 한 좋은 일들에 대해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존슨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본처럼) 외국의 정복 세력이나, (타이완에서처럼) 엘리트 계층이 안겨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기 때문에 앞의 두 나라보다 더 강할 것이다.²⁵⁾

어렵게 얻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은 김근태에게도 큰 자부심이었다. 그가 설명하기를, “6월 항쟁 이전에는 한국인들이 일본인에 비해 열등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동등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일본인들은 다시 눈을 뜨고 한국인에 대한 우월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했다. 그 때부터 한국인들은 경제, 심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일본인들과 동등하게 대화하기 시작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화는 국민들이 쟁취했기 때문에 맥아더의 독재를 통해 얻은 일본 민주주의보다 깊다”고 생각한다.²⁶⁾ 2008년 박원순도 한국의 시민 사회에 대해 김근태가 느낀 것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시민운동가들이 한국 NGO들이 선거에 나온 부패 보수 정치인들의 기록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이기는 데 성공했다는 데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카네기 협의회와 자유주의자들과 사무엘 헌팅턴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 카네기 보고서에는 한국적 가치는 “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으며”²⁷⁾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불편”해하고²⁸⁾ “엘리트가 통치하기를”²⁹⁾ 바란다는 주장이 들

24) Sunhyuk Kim, “Civic Mobilization for Democratic Reform,” in *Institutional Reform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edited by Larry Diamond and Doh Chull Shin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p. 281.

25) Chalmers Johnson,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The Role of Economic Development,” *Korea Under Roh Tae-Woo: Democratization, Northern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edited by James Cotton (Canberra: Allen and Unwin, 1993) p. 107.

26) 김근태와 2008년 8월 2일 서울에서 인터뷰

27) Donald S. Macdonald, in Carnegie Council, p. 24.

28) Stephen Kirby, in Carnegie Council, p. 756.

어 있다. 이렇게 한국 시민사회를 축소시키고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비난하는 태도는 한국에 대한 진보적 평가에서도 보이는데, 이는 한 세기 동안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종속된 결과이다.

브루스 커밍스는 ‘민중이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었다고 한다. 커밍스에 따르면 시민사회가 “1985년 2월 총선과 함께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³⁰⁾ 그레고리 헨더슨와 마찬가지로, 커밍스는 전통적 한국사회에는 강한 시민사회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강한 시민사회는 1980년대와 1990년대 현대사의 극심한 혼란의 산물이자 선물로서 처음으로 나타났다.”³¹⁾ 커밍스는 유럽적 시민사회를 보편화하는 보는 오류를 범하는데, 특히 자율적 개인과 유럽적 형식의 시민사회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 커밍스는 하버마스의 이상적 의사소통 공동체 개념을 빌려 “지식인들은 자각된 시민 사회의 주요 운반자”³²⁾이지만 여기에 1980년 광주항쟁 당시의 한국 지식인들이나 과거 민간 교육기관인 서원의 전통적 한국 지식인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양반들이 고위관료가 되기 위해 과거시험 공부를 하던 민간 교육기관 서원은 한 때 그 수가 너무 늘어나서 1700년에는 조선에 중국보다도 많은 600개가 있었다. 지역에 추종자를 거느린 특정 학자들에 집중된 서원은 “이성적 대중”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서, 공공영역의 일부 또는 시민사회의 중간 기구였다.³³⁾ 지방 학자들은 종종 국가와 국민 사이의 중개 역할을 했으며, 전통사회에 필수적인 구성원이었다.³⁴⁾ 하버마스가 그랬듯이, 유럽중심적 틀은 서구적 개인을 실체화하고, 유럽의 역사적 흐름이 모든 사회에 적용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보편적 범주를 만들게 한다.

커밍스는 시민사회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갖는 실제 관계들 속에서가 아니라, 국가와 일반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국가에 실제보다 많은 권력이 있다고 여긴다. 박정희의 쿠데타는 “시민사회를 폐쇄한” 행위이고 “시민사회는 1985년 2월 총선과 함께 다시 깨어났다”는 것이다.³⁵⁾ 그는 많은 서구 민주화 이론가들처럼, 일본은 1945년 이후, 한국은 1993년 이후에 민주주의국가가 됐다고 믿는다.³⁶⁾ 이 두 나라가 의회 민주주의를 향해 간 여정은 매우 달랐다. 한국에서는 시민 사회로부터의 심한 투쟁을 통해 민주적 개혁을 쟁취했다. 이는 위로부터, 즉 맥아더가 정해준 선거제도를 따른 일본과는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스는 “대한민국은 아직 일본이나 미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모델에 미치지 못한다”라면서 그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든다. 그런데 국보법은 미국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일본식 모델 하에 1948년에 만들어진 것이다.³⁷⁾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에서 지속되는 분단은 정치적, 경제적 삶의 많은 부분을 왜곡시킨다.

29) Kirby, p. 73.

30) Cumings, “Civil Society in West and East,” in Charles Armstrong, (editor),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London: Routledge, 2007) p. 24.

31) Cumings in Armstrong, p. 9

32) Cumings in Armstrong, p. 17.

33) JaHyun Kim Haboush, “Academies and Civil Society in Chosun Korea,” in *La société civile face à l'État: dans les traditions chinoise, japonaise, coréenne et vietnamienne* (Paris: École-française d'extrême-orient, 1994).

34) Cho Hein, “The Historical Origin of Civil Society in Korea,” *Korea Journal* 37: 2 (Summer 1997).

35) Cumings in Armstrong, pp. 23-4.

36) Cumings in Armstrong, p. 22.

37) Cumings in Armstrong, p. 26.

광주 중심성의 지속

한국 민주주의와 이에 따른 한류에 대한 공의 대부분은,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돌려야 하는데, 그 전환점은 광주 항쟁이었다. 수십 년간의 사회운동은 정치적 자유와 문화적 자신감을 형성했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면 한국의 문화 한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독재정권이 진실을 억누르려 했기 때문에 광주 항쟁은 이후 10년 넘게 문화적 저항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성공 이후 진행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과도기의 정의는 다시 한 번 광주 시민들이 주도했고, 이는 항쟁의 희생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기념 묘역 조성을 이끌어냈다. 풀뿌리 차원에서의 오랜 투쟁 끝에, 국회는 1995년에 5.18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장학금과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5.18기념재단이 설립됐다. 제주에서는 지방정부가 광주의 선례를 따라 1948년 제주에서 벌어진 학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유사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끝에 결국 성공했다.³⁸⁾

광주의 운동가들은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물 건립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 정의를 위해 싸웠으며, 한국의 운동은 아시아 전역에 민주화의 기준이 됐다.³⁹⁾ 1993년부터 광주 시민들은 5월 항쟁에 관련된 국제 학술 토론회를 5회 이상 개최했고, 5.18 기념재단은 계속해서 국제 연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현장에서 싸우는 운동가들을 위한 인권상과 국제평화포럼 같은 연례행사가 열리고 있고, 수백 명의 운동가들이 광주의 역사를 배우고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하기 위해 민속학교에 모여든다. 또한, NGO 지원금은 스리랑카의 '사라진 사람들의 날'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의 프로젝트 단체들을 돕고 있다. 1997년 광주시민연대는 항쟁 당시 광주에 있었던 외신 기자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⁴⁰⁾

광주 출신의 운동가들은 동티모르, 캄보디아, 태국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평화 캠프를 진행했다. 그들은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항쟁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도 했다. 네팔, 미얀마, 필리핀, 부탄,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에서 운동가와 학자들을 초청해 운동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사하고 다른 양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에는, 홍콩, 인도, 네팔, 한국에서 4년간 회의를 열고 200개의 NGO가 직접 참여한 결과물인 '아시아 인권 헌장'을 발표했다. 이 헌장이 발표되었을 때 토론회에서는 "광주 학살과 이에 대한 광주 시민과 한국 국민들의 대응은 아시아 인권운동 발전에 있어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 그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동의했다.

38) See Ko Chang-hoon, "The US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the Jeju April Third Uprising and Massacre: An Islander's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Jeju Sasam Uprising and East Asian Peace: International Legal Issues and Human Rights in 21st Century Korea, Harvard University, April 25, 2003; also see Na Kahn-chae, "The Revival Movement of the Two Uprisings in Korea: Jeju and Gwangju," 2006.

39) For analysis of the long struggle of the May Movement, see Na Kahn-chae, "A New Perspective on the Gwangju People's Resistance Struggle, 1980-1997," in *South Korean Democracy: Legacy of the Gwangju Uprising*, edited by George Katsiaficas and Na Kahn-chae(London: Routledge, 2006).

40) *The Kwangju Uprising: Eyewitness Press Accounts of Korea's Tiananmen*, edited by Henry Scott-Stokes and Lee Jae-eui(Armonk: M.E. Sharpe; 2000).

스리랑카에서 사라진 수만 명의 사람들 중 일부의 부모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광주 운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1999년 콜롬보 랏돌루카마(시두와)에 실종자 기념관을 지을 영감을 얻었다. “그들은 한국 유가족들의 경험에서 힘을 얻었다. 5.18 민주묘역과 옛 망월동 묘지도 방문했다. 이 경험 때문에 사라진 이들을 위한 기념물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⁴¹⁾ 광주의 영감은 아시아 전역에 전해졌다. 태국의 1992년 5월 영웅(1992년 태국에서 있었던 항쟁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친족회의 회원인 아나오른 키유보리분은 1996년 광주를 방문하여 “한국 국민들의 하나 된 운동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다”라고 말했다. 2000년 11월 3일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지도자 호세 알렉산드레 구스마오는 국제인권상을 수상하면서 광주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하기를, “광주에 와서 영광이고, 여기서는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벌어진 일은, 이후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큰 힘이 됐기 때문이다.” 2004년 5월 18일, 윈 켓 민족민주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은 아웅산 수 치에게 시상된 광주인권상을 대리 수상했다. 그는 광주가 자신들의 운동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주춧돌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매우 감사하고, 광주가 미얀마에서 평등과 자결을 바탕으로 한 진정으로 민주적인 연방의 확립을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 모델이라고 굳게 믿는다.” 2009년에 만난 네팔의 총리 마드하브 네팔은 자기 나라에서 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광주를 찾은 적이 있는데 “시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감명 받았다”고 나에게 말했다.⁴²⁾

광주 항쟁에서 반세계화 시위까지, 한국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1999년 시애틀에서 일어난 반WTO 시위 당시, 용기 있는 한국 참가자들은 거리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다. 2003년 칸쿤에서 열린WTO 각료회의에서 한국인들의 통합된 모습과 이정혜의 자살은 아메리카 대륙 선주민들에게 전설이 됐다.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칸쿤 회의장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자, 수십 명의 한국 농민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함께 밧줄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어려서부터 매년 동네에서 열리는 고싸움놀이를 준비하며 손으로 밧줄을 만드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농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새끼를 꼬고 엮어 만든 밧줄을 바리케이트에 걸어, 모두의 도움과 응원을 받아 경찰의 장애물을 치울 수 있었다. 전통 시민사회가 집회에 도구를 제공한 구체적인 사례이다.

2005년 12월 13 WTO회의가 열린 홍콩에서는 수십 명의 한국 농민들이 경찰 방어선을 피해 컨벤션 센터로 가기 위해 행렬에서 벗어나 주황색 구멍조끼를 입고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전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단합된 운동의 힘을, 즉 민중이 어떻게 거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줬다. 한국 운동가들의 창의적이고 용감한 행동은 수천 명에게 경찰의 위위를 거부하도록 했다. 한국은 제3세계 여러 국가들이 튼튼한 경제, 민주주의 개혁 성취, 그리고 전통문화 때문에 존경하는 본보기이다.

41) Sanjewa Liyanage “Memory, Missing People and Hope for Peace in Sri Lanka,”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Historical Memory and Cultural Representation,” 15-17 May 2003, p. 117.

42) 마드하브 쿠마르 네팔 2009.4.12. 카트만두 인터뷰.

전통과 해방의 변증법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한국의 역사적 자원 중 하나이다. 풍부한 시민사회는 일상생활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중간 및 소규모의 모임들을 포함하며, 인간관계의 가치는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상호존중 어디에나 있다. 현대 한국의 음양에서, 독재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쟁취한 사회성이, 동시에 개인의 자유, 특히 여성의 해방을 방해하고 있다. 가부장적 유교주의 구조는 행동과 기회의 양상을 강력히 규제한다. 젊은이들은 연장자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봉사할 의무를 지고, 빈자는 부자에게 아침하며 결정을 맡겨야 한다. 가까운 사이의 남자들은 흔히 서로를 동등한 호칭보다는 ‘형님’, ‘아우님’이라고 부르고, 학교나 직장에서는 나이에 따라 “선배”나 “후배”라고 한다. 호칭이나 동사 변화, 그리고 수많은 의례와 규칙에 나타나듯, 수직적 구조의 관계가 내부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공손함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렇게 상하관계가 내포된 형태가 가족의 편안함과 보살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금의 결합체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 낮은 사람 사이에도 흔히 “아저씨”나 “언니”라고 부르면서 상하관계를 더 받아들이기 쉽게 하면서, 동시에 이에 항의하기 어렵게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저항을 조직할 수 있는 원천인 동시에, 혁명적 각성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또한 익숙한 양식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서구의 경쟁적 행동에서 보는 개인주의적 소외와 비교하면 대단한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적 형태이지만, 동시에 개인을 사회체계의 고정된 자리에 묶어두는 도구이기도 하다. 가부장적 권력이 만연한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체계적으로 학대당한다. 2009년, 미디어를 지배하던 남성들에게 위협과 성적 학대를 당하던 배우 장자연의 자살이 이러한 결과이다. 사회운동도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같은 달에, 성폭력 의혹 때문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 사퇴했다. 2009년, 해고에 반대한 쌍용 노동자들이 투석기, 화염병과 여러 무기를 가지고 77일간 공장을 점거한 사례처럼, 한국의 노동자들은 전세계 어느 곳보다 강력한 투쟁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내부의 성차별적 역할 때문에 큰 손상을 입었다.

자유와 비용

2008년 말,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축재의 체제가 거의 붕괴하면서, 전세계적 불황이 시작됐다. 이 사건 이후로 미국 헤게모니는 20세기에 누렸던 우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 호황과 침체의 주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병과 고통을 가져오는 —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세계체제의 불합리성은 전세계적 빈곤이 심해지던 때 은행가들이 받은 엄청난 보너스에서도 볼 수 있다. 2008년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는 10억 명이 기아, 20억 명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고, 이번 위기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 때문에 1억 명은 “절대 빈곤”에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은 계속해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간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

을 쥐서, 부국의 회사들이 빈국의 농민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체제의 변방에서는 기아가 증가하고, 이익은 중심으로 모인다. 이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즉 세계의 빈자에서 부자로, 부의 체계적 이동을 보여주는 한 가지 면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보고서에서 “어린이들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고, 기아와 빈곤 때문에 매일 25,000명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한 것이 놀라울 것이 있겠는가? 이런 통계수치들은, 시위에 나온 한국 여학생들과 같이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젊음의 힘이 없다면, 우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체계적이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거대 기업들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서민의 단순한 요구가 과학, 정치, 그리고 특히 경제에서 중심이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자란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줄인) 신선한 음식이 필요하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또는 전쟁에 대한 끊임없는 준비)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정부가 필요하다. 광주 해방구와 2008년 촛불집회에서 보여졌던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체제는 기업이 만든 건강하지 않은 음식과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체계적 기아를 만든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MB나 부시 같은 지도자들은, 멍청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들을 주도했던 수백 명의 중고등학생 소녀들은 이런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이 소녀들은, 선출됐든 아니든, 한국의 엘리트들보다 뛰어난 “집단지성”을 구현했다. 선출된 공직자의 독단으로 밀어붙이는 대신에, 이 소녀들은 핵심문제들을 토론하면서 시민들의 직접적 의사결정을 민주주의의 중심이 놓으려는, 전세계적 풀뿌리 운동의 노력의 일부였다.

21세기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이 무관심하다고 불평했지만, 갑작스러운 촛불집회의 발생으로 수십 명의 일반 서민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문 운동가가 됐다. 이들은 집회를 한 가지 틀에 끼워 맞추려는 이전의 운동가들과 거리를 두었다. 이런 새로운 운동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일시적이며, 계급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이익을 위해 시위를 조직했다. 모든 자율적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정치정당과 무관했으며, 소중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중앙 조직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했다.⁴³⁾ 유전자 조작, 대량생산 식품, 호르몬, 살충제 등 우리를 오염시키는 현대기술의 “경이”들과는 달리, 촛불집회는 인간의 순수성을 받아들인다. 사이버그나 마키아벨리식 권력게임이 아닌, 에로스와 인간성이 그 핵심에 있다. 옛 운동권 세력에 편입되는 대신, 이들은 사이버공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집단지성을 만들어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한 대통령만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보다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국민들의 번영은 시민사회와 “시위문화”가 시민사회를 결집시키는 역량에 달려 있다. 최근에 새 책을 쓰던 중, 한국 20세기의 기나긴 항쟁의 역사를 돌아보다가 한 가지 반복되는 주제가 명확해졌다. 바로 일반 서민들의 집단지성이 기존 엘리트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

43) 수십 년에 걸친 한국 운동의 결정화가 왜 촛불집회가 그렇게 빨리 자랐는지 설명해준다. 1976년부터 DJ와 오중일 등이 독재정권에 대한 하나의 전술로 진행했는데, 1894년 농민들이 광주에서 횃불 행진을 했을 때부터 불은 운동을 부채질하는 도구로 쓰여 왔다. 촛불집회는 1987년 6월 항쟁 때 서울(6월 15일)과 부산(6월 17일)에서 나타났고, 2002년 효선과 미선을 위한 몇 주간의 추모행사와, 183일간 계속되어 핵폐기장을 막아낸 부안 투쟁에서도에서도 중요한 표현의 수단이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촛불을 들었고, 평택에서는 새로운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매일 2년 넘게 이어졌다. 축제처럼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최근의 집회들은 (시민운동의 개혁주의를 재생산하기보다는)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민중운동을 재점화했다

다. 1894년 조선왕조와 이를 보호하는 일본에 반기를 든 운동에서부터 십대 여학생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과의 관계에 항의하는 것까지, 수십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 희생이 따른다 해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당한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왔다.

피로 얼룩졌던 기나긴 20세기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 중 하나는, 자신들의 힘과, 역사의 주체이자 객체로서의 자신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 그리고 다시 불붙은 상상력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다.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지난 투쟁의 소중한 유산이다. 힘든 싸움 끝에 거대한 승리를 쟁취했으며, 다음 세대들은 그 교훈을 배우고 자유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 이미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 군부를 권력에서 몰아냈다. 노조를 만들고, 여교생을 리더로 만드는 문화적 변화를 이루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유교적 시민사회의 관대함이 이러한 변화를 더 수월하게 했다. 1980년대 엘살바도르나 1990년대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에서 있었던 만행을 생각할 때, 한국인들은 훨씬 상황이 좋다.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이나, 2009년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 때 수천 명이 한겨울 추위 속에 해안을 깨끗이 청소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 한국인들의 단결은 앞으로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가르침을 줄 것이다. 2009년, 수많은 노사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의 예의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한국경제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고 평했다.⁴⁴⁾

19세기와는 달리, 이제는 역사가 단선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어제의 진보가 내일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너무나 쉽게 퇴보할 수 있다. 바이마르 민주주의 직후 히틀러의 집권이 그렇다. 더 최근의 사례를 보면, 필리핀 국민들이 1992년 미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냉전 대신 “테러와의 전쟁”으로 군국주의를 정당화하면서 다시 주둔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와 번영이 미래 세대에게도 똑같은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평화보다 “국가안보”를 더 중시하는 국가 관료들에 저항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부를 탐하는 부자들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축소되고 번영은 사라질 것이다.

한국은 완전한 해방을 이루기 전에 운동이 쇠퇴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간단한 명제를 고려해 보기 바란다.

1. 사회운동 덕분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됐다.
2. 기존 세계체제가 가진 가장 막강한 힘들 중 하나는 바로 자신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공격을 흡수하고 무디게 하는 능력이다.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 러시아와 중국 혁명, 프랑스의 1968년 5월 항쟁, 그리고 20세기 말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물결은 모두 체제 합리화, 즉 시장 확대와 더 많은 자원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 됐다.

‘타당함’ 체제를 만드는 일은 아직 진행 중이다. 소수의 기업 지배층과 그들의 정치인 친구들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게 놔둘지 말지가 지금 우리 모두 선택의 기로에 있다. 최근의 쇠퇴가 현실이기는 하지만, 20세기 전반에 걸쳐 얻어낸 많은 자유도 현실이다. 비록 외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 경제 권력이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권력은 대부분 한국인의 손에

44) Choe Sang-hun, “South Koreans Band Together to Save, and Create, Jobs,” *The New York Times*, April 1, 2009.

있다.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한국인들은 마침내 21세기에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우리 모두를 고귀하게 할 것이다. 미국 민권운동의 희생이 사회 전반의 격을 높였듯이, 한국인들은 피로 얼룩진 기나긴 20세기의 투쟁을 통해 세계를 더 관대하고 참여적으로 만들었다.